

한반도 정전체제 → 평화체제 전환 첫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서명한 10개 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반대하고도 구체적인 합의를 담고 있다.

마지막 방전지대였던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전환하기 위한 평화정착 방안과 함께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구체적 경제협력사업들, 남북 간 불신의 벽을 허물고 통일로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조치 등이 총망라됐다는 평가다. 특히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경험 부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진전이 더뎠던 정치·군사 부문에서도 적잖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남·북·미·중 정상 회담 연말께 가능성

■ 3~4차 한반도 종전 선언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전망이다.

10·4선언 4항에는 종전선언을 위해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을 포함한 3차 혹은 4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도 지난달 시드니에서 노 대통령에게 "나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김정일 위원장 등과 서명하는 것이며 한국전쟁을 종결시켜야 하고 종결시킬 수 있다"면서 이렇듯 긴 위임장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 종전선

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10·4선언에 시기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북핵 6자회담 분위기를 감안하면 4차 정상이 모이는 시기는 핵불능화가 마무리될 연말께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종전선언 문제를 실질 당사자인 남북 정상이 만나 주도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평화체제 전환에 있어서도 남북이 주도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남북 양 정상은 아울러 6자회담에서 도출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공동어로구역 설치·조선협력 단지 건설

■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남북은 그간 최대 분쟁거리 가운데 하나였던 서해바다를 매개로 경제협력과 평화무드 조성의 큰 발을 내디뎠다.

남북 정상이 해주와 주변지역의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이용, 직항로 개설, 공동어로구역 설치 등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의 불씨를 줄이면서 동시에 남북 경제협력력을 추진할 수 있는 대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치들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서해상의 무력충돌 가능성 축소는 물론, 저렴한 비용에 기반한 생산 시설에 목말라하던 국내 기업과 수산자원 고갈에 힘들어하던 어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도 가능할 전망이다.

북측 역시 공단 조성 등에 따른 '평화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안변과 남포에는 조선협력단지를 건설기로 했다. 조선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인건비 상승 등

으로 어려움이 예상돼 국내 업체는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 북한을 주목해 왔다.

북측은 영남배수리공장이 있는 남포와 함께 남측 조선소들과 가까운 동해안의 안변을 협력사업 후보지로 제시했다.

또 조선협력단지 외에도 남측의 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돼 '유무상용'의 대표



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개성공단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양 정상은 합의했다. '문산-봉동(개성) 간 철도화물 수송'에 합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도적 보장조치들도 조속히 완비하기로 했다.

■ 11월 남북 국방장관회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경험 분야에 비해 발전이 크게 더뎠던 군사분야의 협력을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남북은 산적한 군사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중 평양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했다.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1차 국방장관회담이 열린 지 7년 여 만으로, 북측은 그동안 국방장관회담 개최에 소극적이었다.

국방장관회담 의제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7년만에 2차 회담... 군사분야 협력 기초 마련

조성 방안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으로 10·4선언에 적시돼 있다.

이 두가지는 그간 남북정상급회담 등에서 논의돼 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던 사안으로, 공동어로수역은 남북 간 접매에 긴장의 현상이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해 남북이 공동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행되지 못한 ▲임진강·한강하구 공동이용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경의선·동해선 철도개통 등 경험사업들도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방장관회담에서는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직통전화 설치, 군사훈련 상호통보·참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북중인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4일 남포시 평화자동차 공장을 방문, 조립라인을 둘러보다 북한 근로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평양=청와대 사진기자단

중국 경유 않고 1시간만에 백두산 도착

■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남북한은 백두산 남북 직항로 개설과 백두산 관광에 합의, 2년 넘게 지연됐던 백두산 관광 준비작업이 다시 활기를 띠 전망이다. 백두산의 '직항로' 관광시대가 열린 것이다.

백두산에는 3km의 활주로를 보유한 삼지연 공항이 있지만 주로 군공항으로 사용되는 데다 시설이 낙후돼 정부는 백두산 관광성사를 위해 2005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삼지연 공항과 주변 도로 포장용 물자를 공급해 왔다.

건교부는 직항로에 합의했지만 양측간 항

공협정 및 관제와 관한 양해각서가 해결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울-평양 항공노선과 마찬가지로 김포공항 등을 이용해 북측 내륙 상공이 아닌 서해 항로로 돌아서 삼지연 공항으로 가는 방안이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현재 내국인들이 백두산 관광을 하려면 중국 연길까지 인천공항에서 직항로를 이용한 뒤 4륜 구동차로 백두산 정상까지 방문해야 하지만 백두산 직항로가 개통되면 비행기로 1시간이내 도착이 가능해 국내 여행업체로서는 큰 호재다.

현재 연 10만명에 달하는 백두산 관광객



이 중국을 경유하는 대신 남북 직항로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후기자 who@kwangju.co.kr

남북정상 주요 합의사항

- ▲한반도 종전선언 3차 또는 4차 정상회담 추진
- ▲남북정상 수시회담 현안 협의
- ▲11월 서울 남북총리회담 개최
- ▲11월 평양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 설정
- ▲관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 배후지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적극 추진
- ▲남북경제협력공동위 부총리급 격상
- ▲안변 남북 조선협력단지 건설
-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원남 고속도로 개보수
- ▲백두산관광 실시,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베이징 물류직 남북공동환관 경의선 열차 이용 참가
-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 상시 상봉 추진
- ▲남북의회 대화 추진, 통일지원 법제도 정비
- ▲9월5일 기념 방안 강구,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
- ▲문산-봉동간 화물화물 수송 합의

남북 함께 경의선 타고 베이징오류 응원 간다

■ 남북공동응원단 구성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들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이뤄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북측은 정례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 수시로 만나자는 용어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11월에 제1차 총리급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리급회담이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사실상 최고위급 채널이었던 장관급 회담을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 남북은 베이징올림픽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 등에 합의했다.

이르면 연말 상시상봉 영상편지 교환도 추진

■ 이산가족 상봉 확대

우선 이르면 올겨울 말 이산가족전화소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 이산가족 상시상봉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측이 정비할 법률적·제도적 장치로는 국가보안법과 참관지 제한 등 북측이 이른바 '근본문제'로 거론하고 있는 사안들이 꼽힌다.

북측에서는 대남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노동당 규약의 개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또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국회회담은 1980년대에 추진됐지만 열리지 못했었다. /경후기자 who@kwangju.co.kr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들리게 하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모든 난청을 치료합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dogstar.co.kr

무엇보다도 가격저렴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을만한 품질입니다.

상담전화 1588-8499 | 080-222-0100